

한독 워크숍 발표문

한스 자이델 재단 / 평화문제연구소 공동 주최

하르트무트 코쾅

독일 연방의회 의원 / 독일 연방 담당관

독한 의원친선협회장

독한 포럼 공동의장

독한 통일외교정책 자문위원회 공동의장

『통독 25 주년, 독일과 인접국들 간의 외교관계

- 동북 아시아에 주는 함의』

2015 년 6 월 2 일(화), 서울

한독 관계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40 년간 분단이라는 운명을 함께 한 경험이 있으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에서 평화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독일과 유럽은 분단을 극복한지 25 년이 흘렀지만 한국은 여전히 분단국으로 남아 있으며 동북 아시아의 정세 또한 긴장국면에 놓여있다. 이는 독일 및 유럽연합과 한국을 연결시켜 주는 요소이다.

한반도 및 독일의 분단을 통해 양국간의 관계는 상이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관계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제적으로 각각 동서관계의 틀 안에 놓여 있었다. 서독과 동독의 입장에서 한국과 북한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옛 동독에서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직업교육을 받은 바 있으며, 서독에서는 한국 출신 광부와 간호사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독일 통일과 유럽 분단 상황의 극복을 통해 한독 관계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희망하던 대로 독일은 2001 년에 북한과 공식수교를 맺는다. 이는 당시 한국의 김 대중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던 소위 '햇볕정책'을 뒷받침하고 남북한 간의 접근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독일의 통일 사례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접근과 남북한 통일에 대한 희망을 준다. 통일 독일은 한반도 분단 극복을 위해 현재 행해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며 남북한 간의 접근을 위한 과정을 커다란 관심과 지속적인 열의를 가지고 함께 하고 있다.

독일이 통일된 이후 한국과 독일 간의 양국 관계는 정치, 경제, 학술, 문화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독일의 정치, 외교, 경제 부문 및 정치재단들, 독일 문화원, 독일 학술 교류처, 알렉산더 훔볼트 재단 그리고 국제기아원조, 독일 적십자, 독일 천주교 및 개신교 등과 같은 인도적 지원기구 등을 포함하는 여러 조직들을 통해 독일은 현재 남북한 간의 접근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해오고 있다.

한반도 분단 극복을 목표로 하는 남북한 간의 접근을 위한 독일 측의 지지와 기여

독일 연방의회 결의안

독일 연방의회는 지속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다루어 왔으며 계속하여 상응하는 결의안을 발표해 왔다. 마지막 결의안은 2013년 6월에 발표하였다. 해당 결의안은 한반도 분단 극복을 목표로 하는 남북한 간의 접근을 위한 독일의 지지를 나타내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에 대해 '통일을 목표로 하여 대한민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간의 정치적인 접근을 최선을 다해 지지하고 북한의 민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남북한과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 회담의 재개를 위해 진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독일 통일의 국내 정치 및 외교 측면에서의 검토를 위한 한독 정책 자문 위원회

통일 독일은 자국의 분단 및 그 극복과정에 관한 기억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접근과정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다. 독일과 유럽은 1989년과 1990년에 걸쳐 분단을 평화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단 극복을 위한 한국의 모든 노력을 지지하는 동시에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남북한 간의 접근을 위한 독일 측의 기여와 관련하여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 외교부 장관은 2014년 10월 방한 당시에 한국의 윤 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독일은 선생님의 역할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독일 통일의 국내 정치 측면에서의 한독 정책 자문 위원회'

독일 통일 20 주년이 되던 지난 2010 년에 한독 양국은, 독일 통일과정에 관한 정보 및 학술 지식의 교류를 지원하고 한국의 통일정책을 위해 해당 정보와 지식들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양자간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독일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요청에 부응하여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독일의 통일과정에 관한 국가 문서들과 역사적인 문건들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012 년에 설치되었던 한독 자문위원회의 독일 측 대표 참여인사로는 로타르 드 매지에르, 호르스트 텔치 그리고 라이너 에펠만 등을 들 수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노이에스 포룸을 이끌었던 구 동독 시민운동가 출신이며 1990 년에 구 동독 인민회의에서 선출한 동독 국가 보위부(슈타지) 해체 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요아힘 가욱 박사께서 독일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되던 시점까지 함께 활동하신 바 있다. 가욱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분단 상황을 겪고 있는 한국민들과의 유대감을 2013 년 6 월 21 일에 독일 고슬라 시에서 개최되었던 제 12 차 한독 포럼에서 행한 자신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신 바 있다.

'두 개의 국가가 양국 간의 관계를 기념하는 행사를 치를 때에는 주로 가장 번성한 수도에서 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행사를 기쁜 마음으로 치르고 있습니다만, 매우 의식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이 행사를 이 곳 고슬라 시에서 열었습니다. 이 곳 고슬라는 예전 내독간의 경계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며, 따라서 우리는 한독 두 나라를 특별한 방식으로 묶어주고 있는 경험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분단의 경험입니다. 이번 12 차 한독 포럼이 치러지고 있는 이 곳을 저는 용기를 북돋워 주는 징표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내서 경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한국은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여전히 갈라져 있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에 사무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나라 반쪽에는 끔찍한 독재체제가 실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움직이는 또 다른 이유는, 저는 제 인생 상당 부분의 시간들을 다른 편

독일로부터 이념적으로 장벽을 치고 자신의 주민들을 장벽과 지뢰밭으로 막아서 가두고, 마치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들에게서 자유를 앗아갔던 쪽의 독일이라는 국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 5 차 한독 통일 자문위원회 회의가 2015 년 5 월 11 일부터 15 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는 이리스 글라이케 독일 연방 경제 에너지부 차관이 참석하였다. 공동 기념의 해인 2015 년 올해의 만남에서는 본 회의를 처음으로 공개회의로 진행하였으며, 한국 분단 70 년 및 통독 25 주년의 성과와 의미를 조명해 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한반도 통일 시에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을 것인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독일 통일 이후 해결해야 했던 그리고 현재까지도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언급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현실감각 및 균형감각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한국의 상황이 여러 가지 점에서 1989 년과 1990 년 독일의 그것과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 통일 시에 발생했던 경제적 도전을 한국 통일과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필자는, 독일은 통일과 관련된 거대한 당면과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싶다. 통일 독일은 현재 1990 년 이전 분단되어 있던 2 개의 독일보다 경제적으로 더욱 강해졌으며, 통일비용을 막대한 규모의 분단비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양측은 각자 상이한 두 개의 경제체제를 통합함에 있어서 제한사항을 감수하고 부담을 떠안아야만 한다. 분단은 나눔을 통해서만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분단상황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미 지금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밝히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거 독일 분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분단상황으로 인한 지출 비용 또한 매우 높다. 예를 들면 높은 군사지출비용 또는 군사분계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예산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예산 지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독일 또한 과거 분단 시에 소위 접경지역 지원예산을 지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계속되는 분단으로 인한

비용이 통일 한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높은 것은 확실하며, 독일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독일 통일에 투입된 미래 투자는 작금의 경제금융위기를 감안할 때 두 배로 지불한 셈이지만 유럽에서 독일만큼 경제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나라는 없다!

한반도의 분단은 과거 동서독 간의 그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극단적인 양상을 보인다. 현재까지 군사분계선을 넘어 이렇다 할만한 규모의 사람 또는 정보 그리고 소통의 교류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 통일 한국을 경험했던 나이 많으신 세대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접근과 통일에 대한 열의가 점점 줄어들어 버리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나 학교, 대학 그리고 역사학자들이나 문화계 인사 등은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정신을 일깨워 주고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에게 왜 그들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지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이 분단된 지 70 년이 지났으며 한 쪽에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가 구현되고 있는데 반해 다른 한 쪽에서는 전체주의 정권이 통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수 천 년에 이르는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 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북한 동포들의 상황에 관해 알고 이해를 높여서 정치, 사회적인 접근과 화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만남과 모든 접촉 그리고 모든 교류는 민족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발걸음이다.

'한독 통일 외교 정책 자문 위원회'

남북한 간에 다시 가까워지기 위한 전제는 그에 유리한 지역적, 국제적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다. 독일이 유럽 내 파트너들이나 미국과 같은 파트너를 가지지 못했거나 고르바초프의 등장에 따른 독일 정책과 관련된 소련 지도부의 변화를 위한 통찰이 없었다면 독일의 통일과정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접근을 위해서는 유엔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지역 주요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께서 독일을 국빈 방문하셨을 때인 2014년 3월에 남북한 간의 접근을 위한 독일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베를린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독일 연방 외교부 장관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박사와 대한민국 윤병세 외교부 장관 간에 '한독 통일 외교 정책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4년 9월에 관련 양해각서 서명식이 있었다. 2014년 10월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 외교부 장관의 서울 방문 시에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었으며,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필자를 독일 측 공동의장에 임명하였다. 해당 정책 자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5년 2월에 개최되었다.

한독 통일 외교 정책 자문 위원회는 한국이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 관한 정치적 담론과 관련하여 창의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한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내딛는 데에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의 신뢰 및 안보 구축 방안은 향후 독일 통일 및 유럽 통합 그리고 2+4 조약 및 '파리 헌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각 진영들 간의 신뢰를 전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안보적 측면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오해와 긴장관계 그리고 무력 충돌을 피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독일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활동을 하며 경험한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훈련 및 대규모 병력의 재배치에 대한 고지, 핫라인 및 위기 시 소통 채널 설치, 접촉 장애물 제거 및 연례훈련 적응을 위한 여지에 관한 논의 등이 있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 외교부 장관은 2014년 10월 방한 당시에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난제인 한반도에서의 신뢰 구축에 관해 논의한 바 있으며, 논의의 주제로는 북한 내부의 투명성 결여와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계속되는 열성적인 핵 프로그램 추구 등이 포함되었다.

독일 및 유럽 정치의 행동 선택권

남북한 간의 접근에 있어서 독일은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진정한 충고를 하는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독일의 경험과 유럽의 경험(CSCE-프로세스)을 전달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분단과 접근 정책 그리고 통일과정과 관련된 독일의 경험들은 한국의 정치, 학술 및 사회 분야에 분명히 고유한 방향 정립을 위한 중요한 자극제 역할을 할 것이며 한국이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독일은 충고와 가능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독일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적인 발전 및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 확대 그리고 경제, 사회, 교육, 학술, 인도주의 부문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협력을 위한 모든 주제들을 모두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6자 회담'의 재개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일을 목표로 하는 남북한 간의 접근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독일은 이러한 과정에서 동서독간 접근과정의 경험과 동서독 관계가 처해 있던 유럽 및 국제적 틀에 관한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통일을 이룬 독일의 방식을 반드시 모범사례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남북한과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이 재개되어 북한 핵 문제에 진전이 있게 된다면 동북아시아 판 CSCE-프로세스가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서 대결을 극복했던 유럽연합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연방의회는 2002년에 이미 전(全) 정당 공동발의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의 CSCE-프로세스 형태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다음은 해당 결의안의 내용이다.

'유럽은 자신의 뼈아픈 역사를 통해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위험한 긴장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유럽 대륙은 긴장완화정책 및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프로세스를 통한 냉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경험을 하였다. 현재 한반도에 존재하는 긴장관계를 억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비전은 하나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북핵 문제의 해결만을 목표로 하는 일차원적인 방식이 아니라 동시에 신뢰 구축과 군비 관리, 경제 및 에너지 문제 그리고 사회 변화 및 인권 등 폭넓은 대화와 이해관계의 균형을 포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남북한의 두 개 인접국가들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UN 사무총장 등 여러 주요 국제 이해 당사국들이 참가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로써 북한은 한국 또는 미국과의 양자간 용인을 통해 현재 구사하고 있는 무책임한 협박정치에 대한 『보상』을 받는 일 없이 『주고 받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복합적 차원의 틀 안에서 자신이 처해있는 위험한 국제적 고립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동북 아시아에서의 이러한 복합적 차원의 안보 프로세스는 가능한 한 신속한 국제적 안보 발의를 통해 시작이 될 수 있으며 유럽연합이 이러한 발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럽연합은 지난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했던 공동의 외교 및 안보정책을 활성화시키고 국제적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독일은 유럽연합 내에서 이러한 발의를 위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유럽 연합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북한에 대해 독일과 유럽연합은 남북한 간의 대화를 진전시키고 신뢰구축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가능한 모든 대화채널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과 독일은 동북 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신의 있는 '진정한 충고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독일은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북한 지도부 인사들 중 상당수가 과거 동독에서 유학을 하였으며 이들이 지니고 있는 독일의 이미지가 매우 좋기 때문이다.

신뢰구축방안과 대화를 통해 북한의 4 차 핵실험 위험을 억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4 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UN 과 EU 는 불가피하게 추가제재논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2084 결의안(2013 년)에서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중대한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독일과의 정치적인 대화를 강화하고 독일 정치재단들을 통한 경제적, 정치적 조언을 얻는데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며, 독일은 북한의 그러한 요청에 대해 예를 들면 인권문제의 개선 또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같은 성과를 연계시킨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과의 대화

독일은 한국이 '신뢰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신뢰구축 행보를 계속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독일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동북 아시아 지역안보회의 차원에서 6자 회담을 확대하도록 시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형태의 회의를 통해 -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핵 문제에 관한 논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채 - 양자간 또는 지역의 신뢰구축과 군비제한을 위한 행보에 관한 논의가 가능하며 그에 따라 중기적으로 비핵화 문제의 논의를 재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 특히 중국과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지역 차원의 안보 보장(중국을 통하거나 다자간 틀 내에서)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 관련 수행과제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안보회의 형태는 한국의 제안인 '동북아 평화협력' 발의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틀 내에서 환경, 에너지와 같은 비정치적 주제와 핵 안전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욱 독일 연방 대통령은 2013년 6월 21일 고슬라 시에서 행한 연설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감하셨으며, 필자는 이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 평화통일에 대한 전망은 마치 환상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25년 전 유럽의 한복판에서도 소비에트 권력이 지배하는 제국의 붕괴는 마치 환상처럼 보였습니다만 무너졌습니다. 한국에서도 과거에 예상치 못하는 역사적인 변화들이 존재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취 볼 때 저는 진심으로 인내와 확신 그리고 용기를 가지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막강한 체제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희망은 우리 모두를 떠받치는 힘입니다. 한국과 같이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성공을 거두었으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문화와 나라의 독립을 지켜온 이러한 나라는 통일 또한 다시 이뤄낼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